■ 지방선거 핫코너

'경선' 아름다운 승복 이후…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이 환영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수 원내대표, 김문일 예비후보, 정몽준 대표,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 정 훈 예비후보, 박희태 의원. /연합뉴스

천안함 '국회 진상조사특위' 난항

여야 구성에는 합의…활동 기간·시기 등 세부조건 이견차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진상조사특위 구성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세부 조건을 놓고 큰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6개월 활동 시한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특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후 구성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 위원장을 놓고도 여야는 서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국방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위 구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구성시기나 방식 등은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있어서 여야간 진전이 없었다"면서 "한나라당이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다만 조만간 비공식 회동을 통해 이견을 다시 조율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권력층의 MBC 인사 개입 의혹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독도특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나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문제로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경선 후유증…이번엔 '회유' 논란

신문사 간부 "이용섭 의원측에서 11억 제의" 폭로

이의원측 "사실무근…강의원측 연루 자술서 확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지역 신문사 관계자가 21일 "이용섭 의원 측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대해 이 의원 측이 "신문사 관계자가 먼저 '여론조사 불법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접촉해와 이를 거절했다"며 자작극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호남일보 김덕천 상임고문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소개로 Y씨의 병원에서 이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어 "지난 18일 Y씨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말해주면 11억 원을 주겠다'고 해 내가 이용섭 의원과 3명이 '공동계약' 하자고 제안해 거절됐고, 20일에는 L모씨 사무실에서 자술서 작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이 지목한 Y씨는 이 의원과 중·고등학교 동문으로 현재 광주에서 유명한 의사이고, L씨는 전 광주시의원이며, J씨는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 측 Y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가 '강운태 의원을 한 방에 날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의를 보증하는 의미로 1억1000만원을 (이 의원 측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기에 응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11억원은 내가 언급하지도 않았고, 김씨와 대화 도중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L씨도 "김씨가 '여론조사에 강운태 의원 측이 연루됐다'는 자술서를 나에게 보여줘 회사 여직원으로 하여금 복사해 현재 보관 중"이라며 "김씨가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Y씨가 '진실규명을 위한 김씨의 뜻이 강하므로 꼭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와 진실규명 차원에서 김씨를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김씨에게 '다시는 광주에서 이런 불법과 반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감을 갖고 진실규명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호남일보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원 여론조사 시점에 맞춰 R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이용섭 의원 측은 강운태 의원 측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김강식 "여론조사에 불법행위" 재심 청구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강식 후보가 21일 경선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재심신청서에서 지난 15~16일 실시한 당원여론조사 과정에 불법·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만큼 여론조사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발신용 전화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일부 수신이 가능한 전화기를 사용함으로써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수차례씩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녹색교통 이용 확대 그린시티 구현"

정재훈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녹색 교통 이용의 확대를 통한 그린시티 구현을 위해 남구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1.2%대에 머물고 있는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등 녹색 교통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광주 푸른길(광주역~조선대~옛 남광주역~백운광장~동성중)과 광주 천변 보행로, 제석산, 분적산을 잇는 등산로를 녹색순환 벨트로 조성해 구민 건강 증진 및 녹색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안함 희생자 2함대서 5일간 '해군장'

군·유가족 장례절차 합의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장례가 해군 최고의 예우인 '해군장'으로 5일간 치러지며 평택 2함대사령부 내에서 영결식이 거행된다.

'천안함 전사자가족협의회'(천전협)는 21일 오후 군 당국과 희생장병에 대한 장례절차 논의를 시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전협 나재봉(故나현민 일병 부친)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반부터 4시까지 장례절차와 관련해 군 측과 첫 회의를 벌여 장례를 해군장으로 5일간 하고 영결식은 2함대에서 (거행)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장례 절차와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천전협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해 군 측과 2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세부적인 장례절차 및 시기 등 회의결과는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北 군부, 오늘 금강산 미동결 남측 자산 시찰

북한 군부가 22일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동결되지 않은 우리 측 자산을 둘러보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오늘 현대아산 측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금강산 지구 부동산 조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22일 오전 9시 금강산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남측 부동산 요해(실태조사) 결과를 최종 점검하게 됐다"며 "현대아산은 동결되지 않은 남측 부동산을 돌아볼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실무적 준비를 하라는 것은 군부 인사들이 시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1일 북한 군부의 금강산지구 시찰 방침과 관련, 북한이 남측 부동산을 추가로 동결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동결조치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더 침해한다면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동결조치를 취하겠다고 아직 알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북한 국방위원회의 조사만으로 동결조치를 확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개에 대해 동결을 집행했고, 이산가족면회소 중국 근로자 4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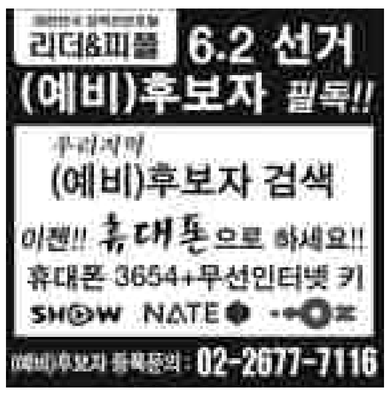
다른 대북 소식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추가적인 압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민간 기업들이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까지 동결하기에 앞선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도시계획 전문성 높인다'

광주시 전문가 초청 목요강좌

광주시가 시민, 학생 등 비전문가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 초청 목요강좌'를 개설했다. 이 강좌는 22일부터 매달 2차례씩 올해 15번 개최될 예정이다.

첫 강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가 '국토종합관리지침 수립방향'이라는 주제로 2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다. 다음달 6일 열리는 두 번째 강좌는 한양대 건축부 서현 교수가 맡았다.

이번 목요강좌는 도시계획과 건축·교통·환경·문화·도시재생·도시개발 등의 주제가 다뤄지며 지역 내·외 전문가 15명의 참여가 확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점차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해지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졌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좌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